

전장연 “장애 인권법안처리하라”...이재명·조국 면담 요청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4대법안 입법 촉구 “책임 방기·폭력 자행한 정부 총선서 심판” “이젠 이재명·조국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 회견 후 당사로 이동해 면담 요청서 전달

비가 내리는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국회에 장애인권 4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부터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권리를 명시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비롯한 장

애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권리로!’ 등이 쓰인 포스터를 들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4대 법안의 입법을 주장했다. 4대 법안은 ▲ 장애인 권리보장법 ▲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 장애인 평생교육법 ▲ 중증장애인공공일

자리특별지원법이다. 전장연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자행하는 동안, 시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자신들의 정치세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갈라치기를 선동하고 장애인 권리 입법 제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다”고 했다.

이어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권리이자,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임에도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방치돼 계류 중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지원특별법 역시 제대로 논의되지 못

하고 21대 국회를 넘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지난 4월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의 갈라치기, 혐오 정치는 시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제 남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위 4대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들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최재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획국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의 기억이다. 그때 경기도청에 이동권 투쟁을 위해 들어갔는데, (이 대표가) 경호원을 대동해 저희를 내쫓은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최 기획국장은 “이 대표가 이후 전장연 사무실에 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오해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며 “이번 면담을 통해 그 오해가 풀리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조 대표를 향해서도 “조국혁신당 당명에 있는 혁신이란 단어가 전장연과 부모연대가 수십 년 동안 외쳐온 혁명과 다른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민주당 중앙당사, 조국혁신당 당사로 이동해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에도 국회 앞에선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집회 및 행진이 열릴 예정이다.

서선욱기자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지난 24일 오후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시 소송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린 전남 무안군 초당대학교에서 광주전투비행장무안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군공항 이전 반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테이저건 맞고 숨진 살인 미수범 미리 범행 계획한 것으로 드러나

계단 숨어있다가 준비한 흉기 의붓아들에 휘둘러

의붓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 테이저건에 맞고 붙잡혀 조사 직전 숨진 50대가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붓아버지인 그는 재혼 후 이혼하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채 가족들이 벌거 중인 아파트를 찾아가던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10여년 전 재혼한 뒤 약 2년 전부터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의붓아들과 딸 등 가족들과 불화가 깊어졌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전날 오후 가족들이 살고 있는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아파트를 찾아가다. 그의 품속에는 흉기도 들려있었다.

아파트 계단 통로에 숨어 있던 A씨는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30대 딸이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하며 집안에 쫓아 들어갔다.

생명을 위협을 느낀 딸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A씨에 의해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살려 달라”는 다급한 외침에 방에서 나온 30대 딸은 곧장 A씨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사이 딸은 신고를 하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A씨는 흉기로 아들

의 어깨와 가슴, 옆구리 등을 찔렀다.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아들의 목을 조르며 다른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

경찰이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했지만 A씨는 저항을 이어갔다. 그가 흉기를 더 휘둘러 경우 피해자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경찰은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쏘았다. 발사된 전극 침은 A씨 등에 꽂혔다.

살인 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로 압송된 지 2분 만에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며 점차 의식이 흐려졌다.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119구급대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병원 도착 36분 만에 결국 숨졌다. 사망 당일 시신을 검안한 병원 측에서는 A씨 사인에 대해 ‘원인 불명 심정지’라는 소견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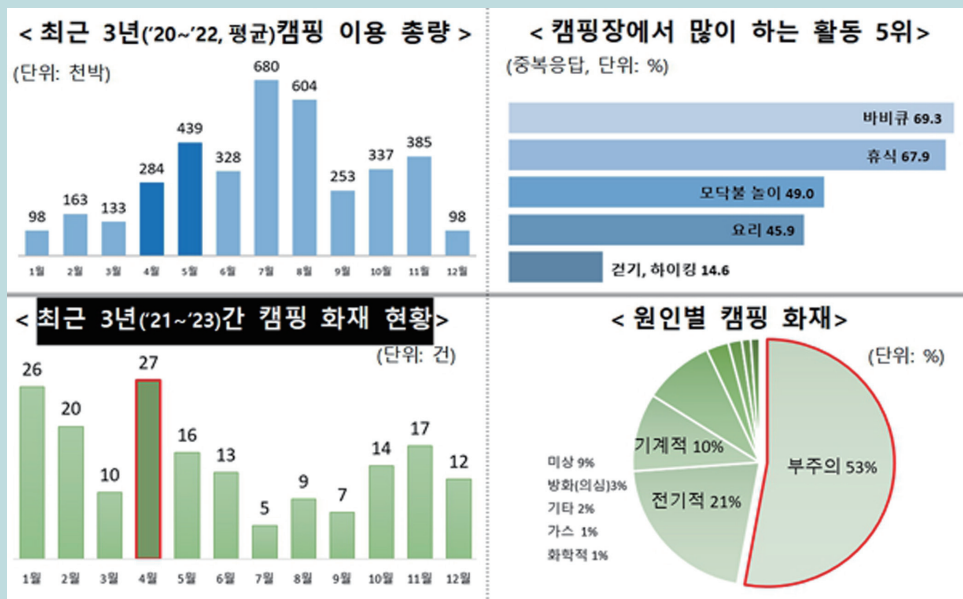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아들은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테이저건에 맞은 시점(오후 5시 59분)과 경찰서 도착 뒤 의식 저하가 발생한 시점(오후 6시 37분) 사이 38분 가량의 시차가 있다”며 “A씨가 지병이 있다는 진술도 있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용일기자

캠핑 화재 4월에 가장 많아...바비큐·모닥불 등 주의해야

2021~2023년 캠핑 중 화재 발생 176건



최근 3년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월별로 분석한 결과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바비큐나 모닥불 놀이 등 불씨 등의 부주의가 절반 가까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같이 밝히며 캠핑 이용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명 이상이다. 지난 2022년

에는 584만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은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바비큐와 모닥불 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이 가운데 4월에 27건으로 월 별로 볼 때 가장 많이 발생

했다. 이러한 화재의 절반 이상(53%)이 불씨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캠핑을 할 때는 바비큐나 모닥불 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시 바비큐·모닥불 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하여 안전한 캠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5·18 관련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서둘러야”

다음달 27일 이후부터 소멸시효 법리 적용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족과 5·18 유공자들에게 5·18 관련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부했다.

다음달 27일 이후부터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따라 소멸시효 법리가 적용돼 관련 청구가 어려워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소멸 시효가 적용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5·18보상법 16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현재는 당시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 관련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그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5·18 유공자들은 향후 이후 겪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족회는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 노환, 노령 등의 이유로 신청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생활고로 인해 소식을 접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국가가 직접 통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슬비기자

광주 서창교차로서 석재 실은 1t 화물차 전도

24일 오전 10시51분께 광주 서구 마륙동 서창교차로에서 석재를 실은 1t 화물차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 A(31)씨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

다. 또 차량이 넘어지면서 쏟아진 석재로 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수연기자